

경호처 '체포저지' 지시에...軍 "부적절"·警 "적법근무 하달"

수방사 55경비단 철문 개방...경찰 202경비단 정위치 유지 崔권한대행 협조 요청에 경찰 '적법절차 따른 근무' 입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3일 이를 저지하려는 대통령 경호처에 군과 경찰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정황이 속속 나타났다.

이들은 공수처 집행 과정에서 별 충돌이 없었고 경호처의 지원 요청에 호응하지 않았다.

5일 경찰과 군 등에 따르면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3중 경호체계다.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이 관저 외곽,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이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하고, 경호처는 담장 내 최근접 경호를 맡는다.

관저로 향하는 첫 번째 철문을 터준 것은 55경비단과 202경비단이었다.

55경비단은 3일 오전 8시2분께 공수

처와 경찰의 협조 요청에 따라 관저로 향하는 첫 번째 철문을 개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위해 경호처에 파견된 부대다. 편제상 수방사 예하지만, 지휘·통제 권한은 경호처에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수뇌부가 체포영장 집행 당시 55경비단 병력을 저지에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경호처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지휘를 받는 202경비단도 의뢰에서 공수처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경호처의 협조 요청이 있었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근무하라는 지시가 202경비단에 하달됐다"고 전했다.

철문을 통과한 수사관들이 맞닥뜨린 1차 저지선은 가로로 주차된 버스였다.

경호처 직원 50여명과 수방사 55경비단으로 추정되는 군부대 인력 30~40명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이 저지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뚫렸다.

이 과정에서 박종준 경호처장은 55경비단과 202경비단에 인력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두 경비단 지휘부는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지 부대장들에게 공수처와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을 만들어선 안된다는 지침을 전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202경비단도 정위치대로 관저 외곽을 지키며 내부는 들어가지 않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호처 요청에 따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경찰의 관저 투입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 또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와 공수처·경찰은 55경비단 투

입을 두고도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1차 저지선을 뚫은 수사관들은 100~150m가량 언덕을 올라가 다시 한번 버스로 만든 차벽과 경호처 직원들에 가로막혔고, 이 2차 저지선을 피해 옆쪽 산길로 80~150m를 더 올라 버스와 승용차가 뒤엎힌 3차 저지선을 다시 맞닥뜨렸다.

1·2차 저지선을 구성했던 경호·군 인력도 언덕을 올라 3차 저지선에 합류해 팔짱을 끼고는 200여명의 인간 띠를 만들어 벽처럼 늘어섰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이 자리에서 일반 병사들도 목격했다는 게 북측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55경비단 외에도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수방사 33군사경찰경호대 병사들도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동원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적으로 공수처 검사 3명이 3차 저지선을 지나 관저 문 앞까지 이동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만났지만, 5시간26분 만에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연합뉴스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

관저 주변 2개 차로 경찰버스 이중 배치 및 한남대로 일부 통제, 지지자 집결 탄핵 반대 집회

사진: 구글 지도

- 1 오전 6시 14분** 공수처 수사팀 차량, 정부과천 청사 출발
- 2 7시 21분** 공수처 수사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도착 및 대기. 경찰 기동대 45개 부대·2,700여명 배치
- 3 8시 2분~4분** 관저 앞 바리케이트 개방, 수사진(30여명 규모) 차량 하차 후 관저 정문 통과·도보 진입 등 체포영장 집행 착수
- 4 약 5시간 이상** 수사진 관저 200m 가까이 접근, 군인·경호처 인력 등 200여명이 벽을 세워 체포영장 집행 불가 상황 지속 및 일부 충돌
- 5 오후 1시 30분** 체포영장 집행 중지·체포 시도 무산, 향후 조치 검토 후 결정. 수사진 관저 철수

※ 체포영장 유효기간 6일까지



“윤석열 체포·구속하라” 지난 4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9차 광주시민총결기대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내란 수괴(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구속을 촉구하며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김예리 기자

광주시민단체 '체포영장 집행 거부尹·경호처 규탄'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오월단체·기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법원 체포영장 집행 거부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이하 광주비상행동)은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가 윤석열 내란 수괴 체포에 실패한 것은 대통령경호처에 의한 공권력 조롱"이라며 "국가 공권력이 내란 범죄 사병들 앞에서 보이는 무기력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공조본은 내란 수괴의 체포를 막아선 경호처장과 하수인들을 내란동조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즉각 체포해야 하고 만약 최 권한대행이 이 조치를 거부한다면 국회는 즉각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오월 공법 3단체(5·18 부상자·공로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5·18기념재단도 보도자료를 통해 "법 집행을 군사작전처럼 방해한 윤석열 내란 수괴와 이에 동조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

법원,尹측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기각

尹측 "대법원 재항고 여부 검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5일 기각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2일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판사가 영장에 적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대법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신청인 측에 사유에 대한 통지도 없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며 "기각 이유를 파악하는 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의신청의 취지는 체포·수색을 불허해 달라는 것으로 이의신청 기각이 영장이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김영록 지사 "국민 배반 윤석열 체포영장 응하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3일 "국민을 배반한 내란 수괴 윤석열은 즉각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에 정신이 없지만 그래도 윤석열의 불법적인 체포영장 무력화 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 한마디 하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그는 "비겁하게 관저에 숨어 소



환조사에 계속 불응하다니 새해 첫날부터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편지를 보내 제2의 내란을 획책한 게 과연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김 지사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이어, 새해 벽두부터 적법한 체포영장을 불법시위로 무산시킨

내란 수괴와 추종자들의 행태에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다"며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격을 어디까지 떨어뜨릴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해 "지금이라도 체포영장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수사에 즉각 임하라"며 "그것이 불법 비상계엄과 비극적인 여객기 참사로 큰 충격과 실의에 빠진 우리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마지막 도리"라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남도밥상을 지키는 사람들

잊혀져 가는 남도음식의 맛과 멋을 총망라!
남도음식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기폭제 마련!

남도는 맛의 고장이다. 기름진 땅과 맑은 물에서 고운 햇살을 받으며 자란 청정 농수산물과 넉넉한 인심으로 맛갈스런 맛을 낸다. 이런 남도 음식중에서도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향토음식을 엄선해 그 가치와 비법 등을 소개했다. 남도 음식의 새로운 진면목은 물론 산업화·세계화를 기대하면서~

구입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입금계좌 광주은행(016-107-323257:예금주-(주)광주매스컴)
정 가 20,000원